

전남광주 청년정책 통합 본격화...연령·현금지원 재설계

목포·광양 권역별 간담회에 청년 네트워크 100여명 참여
청년연령 45세→39세 조정·일률적 현금지원 재검토 제안
출생기본소득·문화복지카드·일자리·주거비 통합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통합 이후 지역별로 운영해 온 청년정책을 하나로 조정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청년연령 기준부터 출생기본소득, 문화복지카드, 일자리와 주거비 지원까지 주요 사업의 통합 방향을 검토하되 도시와 농어촌의 여건 차이, 기존 수혜자의 권리 등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시의회 시정 방향에 맞춰 기존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통합·조정하고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부권과 서부권, 광주권 청년협의체를 비롯해 ‘전남 청년의 목소리’ 등 지역 청년 네트워크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지역 청년센터 대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등도 참석해 권역별 청년정책의 차이와 통합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연령 기준과 출생기본소득, 청년 문화복지카드, 청년 희망일자리와 광주 일경협드림, 주거비 지원사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특별시 전체로 확대할 사업과 지역 특화사업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을 계기로 청년정책의 대상과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환경 및 정책 수요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통합은 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연령 상한을 현재 45세에서 39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책 대상이 지나치게 넓으면 한정된 예산이 분산돼 정작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청년의 정책 참여와 수혜 기회가 줄

어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20세 대학생은 “청년연령을 39세 수준으로 현실화해 20대 청년도 정책 수요자이자 설계자로 참여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금성 지원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통합 이후 늘어날 청년정책 수요에 대응하려면 기존 현금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별 효과와 재정 여건을 토대로 통합특별시 규모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영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행정 편의가 아닌 청년의 눈

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정된 자원 안에서라도 기존 청년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인구감소 지역 청년이나 기존 수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통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는 권역별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각 시·군·구와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와 사업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청년정책 통합·조정안을 마련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구호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소켓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통합시의회 “2차 공공기관 이전, 통합지역 우선 배정을”

농협·수협중앙회 등 10대 핵심기관 최우선 배치 촉구
반도체 기술·인재·용수·소부장 지원기관 유치도 제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통합지역 우선 배정’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고, 종전 전남과 광주에 배정될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지역의 산업적 강점과 연계할 수 있는 10대 핵심기관과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관련 공공기관도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통합지역 우대 방침이 선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320만 통합특별 시민은 약속의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관련 내용이 통합법에도 반영됐다면 정부가 약속한 통합 인센티브를 실제 이전기관 배정에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됐다는 이유로 이전기관 배정 규모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광역 행정통합의

의미를 저버리고 단순히 하나의 광역단위로 간주해 공공기관 배정 규모를 줄이는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종전 전남과 광주 등 2개 시·도에 각각 배정했을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은 공공기관을 통합특별시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략적인 공공기관 배치도 주문했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생산 기반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문화예술, 통합돌봄 등 전남광주의 강점을 고려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10대 핵심기관을 최우선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통합지역 우선 배정 원칙을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분명히 명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기관 배정으로 이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역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과 국가 균형성장 정책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공공기관 유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도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용수 관리,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할 기관이 지역에 집중돼야 국가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들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 몇 곳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을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320만 통합특별시민과 함께 정부의 약속 이행을 지켜보고 공공기관 유치를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임형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길, 김문수, 최선국, 심철의, 박필순, 서영미, 문갑대 의원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동부청사 산업거점 무색...“1급 산업혁신실 신설해야”

주연창 특별시의원 주장...특별시 균형발전 강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동부청사를 산업·투자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고위급 조직과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해 동부권 소외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주연창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4·사진)에 따르면 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조직 개편안에는 광주청사에 기획·경무, 남악청사에 예산·행정, 동부청사에 산업·투자 기능을 각각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



업을 두면서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적된 동부권에는 이에 상응하는 전략조직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 관련 부서가 광주청사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광양만권에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대기·수질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산업단지 환경관리, 탄소중립 산업전환 등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할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부권과 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동부청사의 기후·환경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동부청사에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산업 고도화와 국가산단 친환경 전환, 투자유치, 기업지원, 탄소중립 및 COP33 대응을 총괄하는 ‘1급 산업혁신실’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산업시설과 국가산단은 동부권에 두고 환경·기후 정책의 핵심 기능과 실질적인 조직 권한은 다른 곳에 배치하면 ‘산업은 동부에서 책임지고 결정은 다른 곳에서 하는’ 기형적인 행정체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찾아가는 행복버스’ 광주권역 첫 운행

광산구 평동 봉정마을에서 보건·생활복지 서비스

농어촌과 도서·산간지역 주민에게 보건·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온 ‘찾아가는 행복버스’가 통합 이후 처음으로 광주권역까지 운행 범위를 넓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일 광산구 평동 봉정마을에서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복지 및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존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행복버스가 광주권역을 찾은 첫 사례다. 행정통합을 계기로 전남과 광주 전역의 복지 취약지역을 아우르는 이동형 생활복지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행복버스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기초검진을 비롯해 갈라이, 이·미용, 네일아트 등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남국악단의 국악공연도 함께 열렸다. 이동과 문화시설 이용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복지 서비스에 문화 프로그램을 더했다.

2021년 첫 운행을 시작한 찾아가는 행복버스는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상

대적으로 낮은 농어촌과 도서·산간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형 생활복지 사업이다.

운행 이후 지금까지 1050개 마을을 찾아 주민 3만3000여명에게 기초검진과 생활편의, 문화 프로그램 등 27만4천여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광주권역 첫 운행을 계기로 지역별 생활환경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행복버스의 운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행복버스의 광주권역 확대는 전남과 광주 주민이 생활복지 서비스를 더욱 가까이에서 이용하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계기”라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고흥 나로도서 캠핑 유튜브버 리랑과 ‘섬-머캬프’

20팀 참가 모집...갯벌 해루질·캠핑요리·달빛 시네마 등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캠핑 유튜브버 리랑과 함께 고흥 섬의 자연과 미식, 주민의 삶을 체험하는 특별한 캠핑 행사를 마련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8일 고흥 나로도에서 ‘섬-머캬프(SUM-MER CAMP)’를 개최하고, 행사에 참여할 캠프 20팀을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섬-머캬프’는 여름을 뜻하는 ‘서머(SUMMER)’와 섬을 결합한 이름이다. 캠핑장에서 단순히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섬 주민들과 어울리며 고흥의 자연과 음식, 생활문화를 직접 경험하도록 기획한 체험형 섬 관광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캠핑 유튜브버 리랑이 자신만의 캠핑 노하우를 소개하는 캠핑 클래스로 시작한다. 고흥 섬 주민과 함께하는 갯벌 해루질과 직접 채취한 해산물·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캠핑요리 콘테스트도 진행된다.

전날에는 섬의 밤바다와 달빛을 배경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달빛 시네마’가 마련된다. 관광객과 주민이 프로그램 전반을 함께하며 고흥 섬의 풍경과 맛,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도록 구성했다. 참가 대상은 캠핑을 즐기는 관광객 등 20팀이다. 참가비는 팀당 3만원이며 텐트와 취사 도구 등 캠핑 장비는 참가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캠퍼는 오는 25일까지 신청 사연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행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VISIT 전남광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섬을 둘러본 뒤 떠나는 기존 여행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과 미식, 주민의 삶을 직접 경험하는 체험형 섬 관광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최영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본부장은 “고흥의 바다와 갯벌 등 섬 자원에 캠핑 콘텐츠를 접목해 관광객들이 섬의 매력을 깊이 경험하도록 준비했다”며 “섬마다 지닌 자연과 문화, 주민의 삶을 관광 콘텐츠로 연결해 다시 찾고 싶은 섬 여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